

국가예산 현황과 과제

예산은 어떤 구조로 편성되고 운영되는가


2021.8.30.

이상민

(현)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1. 예산, 재정을 통해 정량적 평가해보기

- 
- 박근혜 정부 잘한점 10가지 못한점 10가지
 - 문재인 정부 잘한점 10가지 못한점 10가지

예산의 분류 기본개념: 예산안 분석은 예산 분류 체계에서 부터 시작

부처별 분류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회계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질별(비목별): 물건비, 자산취득, 인건비...

기능별 분류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 부처별 (십억원)

소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안	4년 증감액	4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비중
합계	400,546	428,834	469,575	512,250	555,790	155,244	38.8%	8.5%	100.0%
보건복지부	57,663	63,155	72,515	82,527	90,154	32,491	56.3%	11.8%	20.9%
고용노동부	18,261	23,803	26,716	30,514	35,481	17,219	94.3%	18.1%	11.1%
국토교통부	41,311	39,723	43,219	50,132	56,725	15,414	37.3%	8.2%	9.9%
교육부	61,632	68,232	74,916	77,387	76,333	14,702	23.9%	5.5%	9.5%
행정안전부	43,413	48,657	55,682	55,547	56,827	13,414	30.9%	7.0%	8.6%
기획재정부	20,310	20,803	21,062	23,391	31,164	10,853	53.4%	11.3%	7.0%
중소벤처기업부	8,537	8,856	10,266	13,364	17,349	8,813	103.2%	19.4%	5.7%
국방부	29,686	31,303	33,108	35,248	37,746	8,060	27.2%	6.2%	5.2%
방위사업청	12,189	13,513	15,365	16,672	17,064	4,875	40.0%	8.8%	3.1%
환경부	6,663	7,318	7,850	9,539	11,078	4,415	66.3%	13.6%	2.8%
산업통상자원부	6,976	6,860	7,693	9,437	11,159	4,183	60.0%	12.5%	2.7%
인사혁신처	17,571	18,745	18,934	19,797	21,359	3,787	21.6%	5.0%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76	14,221	14,946	16,412	17,644	3,468	24.5%	5.6%	2.2%
경찰청	10,101	10,536	10,976	11,617	11,953	1,852	18.3%	4.3%	1.2%
농림축산식품부	14,489	14,500	14,660	15,774	16,132	1,644	11.3%	2.7%	1.1%
금융위원회	248	339	955	886	1,720	1,472	593.1%	62.3%	0.9%
해양수산부	4,976	5,046	5,180	5,603	6,144	1,168	23.5%	5.4%	0.8%
문화체육관광부	5,697	5,258	5,923	6,480	6,827	1,130	19.8%	4.6%	0.7%
법무부	3,298	3,629	3,880	3,897	4,157	859	26.0%	6.0%	0.6%
국가보훈처	4,932	5,486	5,512	5,680	5,787	855	17.3%	4.1%	0.6%
외교부	2,306	2,358	2,450	2,744	2,843	538	23.3%	5.4%	0.3%
여성가족부	683	737	1,047	1,095	1,147	463	67.8%	13.8%	0.3%
산림청	2,011	2,046	2,124	2,226	2,430	419	20.8%	4.8%	0.3%
문화재청	789	802	901	1,091	1,124	335	42.4%	9.2%	0.2%
대법원	1,741	1,824	1,905	2,011	2,061	320	18.4%	4.3%	0.2%
해양경찰청	1,233	1,269	1,373	1,490	1,543	309	25.1%	5.8%	0.2%
국세청	1,610	1,678	1,745	1,837	1,868	258	16.0%	3.8%	0.2%
통일부	1,207	1,190	1,326	1,424	1,461	253	21.0%	4.9%	0.2%
국가정보원	493	463	545	690	746	253	51.3%	10.9%	0.2%
농촌진흥청	916	938	940	1,025	1,088	172	18.7%	4.4%	0.1%
새만금개발청	121	223	256	331	283	162	133.6%	23.6%	0.1%
식품의약품안전처	452	474	511	559	604	153	33.8%	7.5%	0.1%
통계청	286	300	382	483	416	131	45.7%	9.9%	0.1%
국회	574	605	641	679	699	125	21.7%	5.0%	0.1%

1) 부처별 귀속내역 (십억원)

소관명	3년 증감액	비중	누적비중
총합계	112,912	100.0%	-
보건복지부	25,158	22.3%	22.3%
교육부	15,615	13.8%	36.1%
고용노동부	12,354	10.9%	47.1%
행정안전부	12,095	10.7%	57.8%
국토교통부	8,459	7.5%	65.3%
국방부	5,543	4.9%	70.2%
중소벤처기업부	4,953	4.4%	74.6%
기획재정부	4,709	4.2%	78.7%
방위사업청	4,494	4.0%	82.7%
환경부	2,693	2.4%	85.1%
인사혁신처	2,526	2.2%	87.3%
산업통상자원부	2,484	2.2%	8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44	1.9%	91.4%
경찰청	1,516	1.3%	92.8%
농림축산식품부	810	0.7%	93.5%
금융위원회	800	0.7%	94.2%
문화체육관광부	779	0.7%	94.9%

2) 회계별 분류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업 운용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입·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 운용주체간의 협의·조정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외 사용금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편성 • 이용·전용·이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심의·의결		

2) 회계별 분류

특별회계 설치 현황(총 19개)

(단위: 억원)

특별회계	소관부처	근거법률	2019 세출예산
교도작업	법무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268
국가균형발전	기획재정부, 각 소관부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07,485
우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49,198
우체국예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30,929
양곡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20,748
조달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3,942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19,030
등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3,1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99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805
에너지및자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60,206
우체국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9,887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4,933
책임운영기관	기획재정부, 각 소관부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0,856
환경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47,871
국방·군사시설이전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7,921
혁신도시건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646
교통시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57,898
유아교육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8,153
합계			679,921

2) 회계별 분류

일반회계 연도별 지출 총계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 이후는 예산(추경) 기준

2) 회계별 분류

▣ 특별회계 수 및 연도별 지출 총계 ▣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 이후는 예산(추경) 기준

자료: 1. 대한민국재정,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 연도

2) 회계별 재정 지출 변화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대비	추경대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증감률	증감률
총지출				384.9	406.6	434.1	485.1	512.3	554.7	555.8		
총지출증감률					5.60%	6.80%	11.70%	5.60%	14.30%		8.5%	0.2%
	- 예산			264.7	275.2	293.7	329	351.1	377.5	370.9		
	예산증감률				4.0%	6.7%	12.0%				5.6%	-1.7%
		일반회계		217.1	225.6	246.5	277.7	296		314.8	6.4%	
		특별회계		47.6	49.6	47.2	51.3	55.1		60.2	9.3%	
			교통시설특별회계			10.6	10.8	13		14.3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9.9	10.7	9.2		10.3	1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	7.3	6.7		7.4	10.4%	
			환경개선특별회계			4.4	4.3	5.9		7	18.6%	
	- 기금			119.9	127.3	133.8	144.9	161.2	177.2	182.9		
	기금증감률				6.2%	5.1%	8.3%				13.5%	3.2%
			주택도시기금			23.3	25.6	29.6		33.4	12.8%	
			국민연금기금			21.9	23.8	27.4		30	9.5%	
			공무원연금기금			18.5	18.7	19.6		21.1	7.7%	
			고용보험기금			10.9	12.7	15.5		18.8	21.3%	
			공공자금관리기금			12.1	12	13.4		16.9	26.1%	

주)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모두 본예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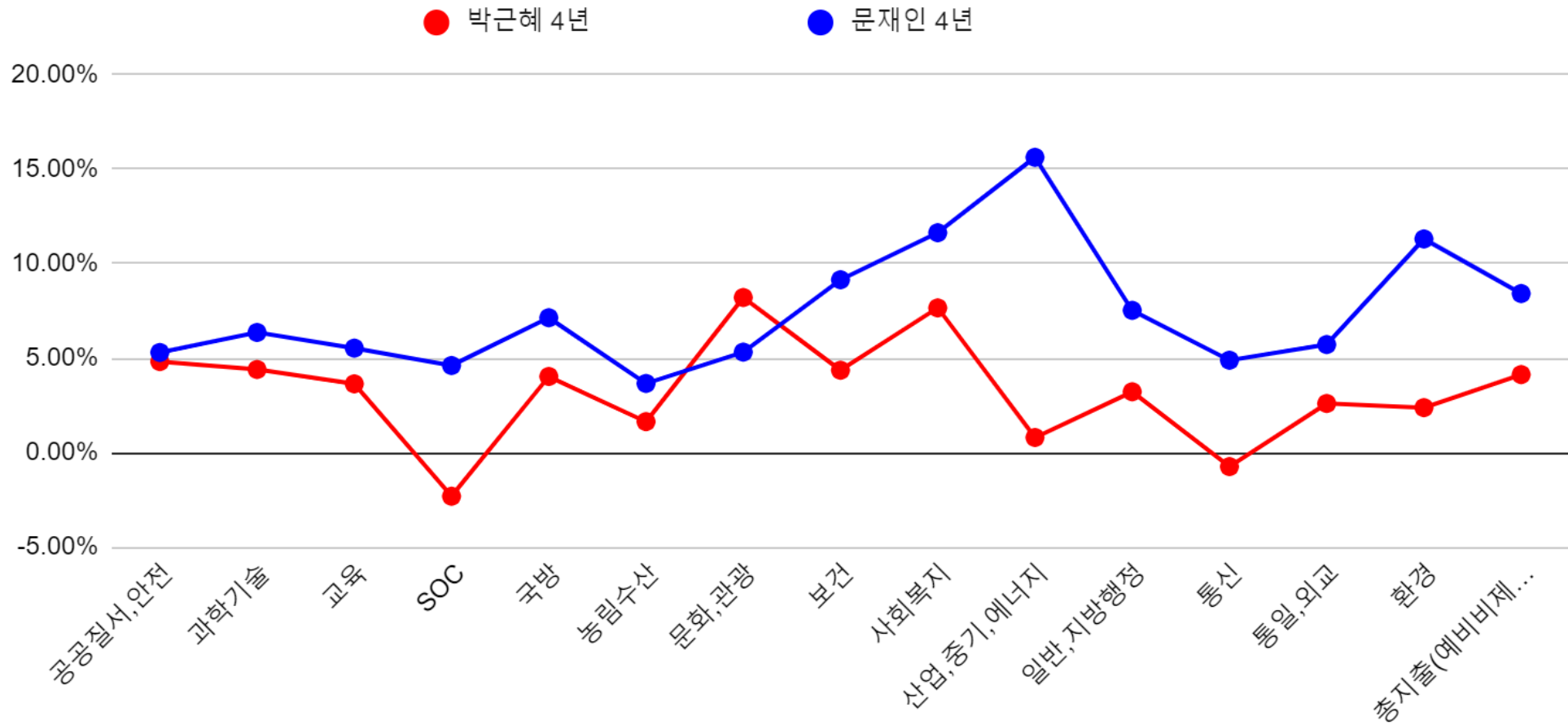
3) 기능별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단위: 백만원)

액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증감액	문재인 4년 증감액
공공질서및안전	15,025	15,787	16,943	17,497	18,140	19,075	20,132	20,837	22,305	3,115	4,165
과학기술	5,908	6,060	6,566	6,768	7,018	7,007	7,303	8,241	8,980	1,110	1,962
교육	49,770	50,700	52,919	53,186	57,412	64,190	70,649	72,634	71,208	7,642	13,795
교통및물류	19,012	18,894	20,294	19,819	18,624	15,326	15,655	19,182	21,424	-388	2,800
국방	33,317	34,739	36,747	37,847	39,023	41,827	45,344	48,693	51,418	5,706	12,394
국토및지역개발	5,290	4,796	4,512	3,875	3,511	3,666	4,098	4,049	5,085	-1,779	1,573
농림수산	18,386	18,733	19,306	19,395	19,622	19,726	20,030	21,515	22,656	1,236	3,034
문화및관광	5,028	5,413	6,120	6,630	6,893	6,461	7,250	8,018	8,482	1,866	1,588
보건	8,732	9,234	10,401	10,534	10,356	11,101	12,120	13,522	14,697	1,624	4,341
사회복지	88,671	97,205	105,281	112,866	119,127	133,515	148,877	167,021	185,046	30,456	65,919
산업,중기업에너지	15,520	15,378	16,422	16,264	16,024	16,309	18,764	23,715	28,649	504	12,625
예비비	3,900	3,535	3,006	3,150	3,000	3,000	3,000	3,400	8,600	-900	5,600
일반·지방행정	55,805	57,248	58,026	59,517	63,338	69,021	76,560	79,013	84,677	7,533	21,339
통신	7,186	7,413	7,552	7,511	6,976	6,989	7,332	7,886	8,443	-211	1,468
통일·외교	4,121	4,214	4,496	4,679	4,566	4,724	5,065	5,509	5,704	445	1,138
환경	6,296	6,456	6,812	6,863	6,916	6,898	7,397	9,013	10,616	620	3,700
총지출(예산)	341,968	355,805	375,403	386,400	400,546	428,834	469,575	512,250	557,987	58,578	157,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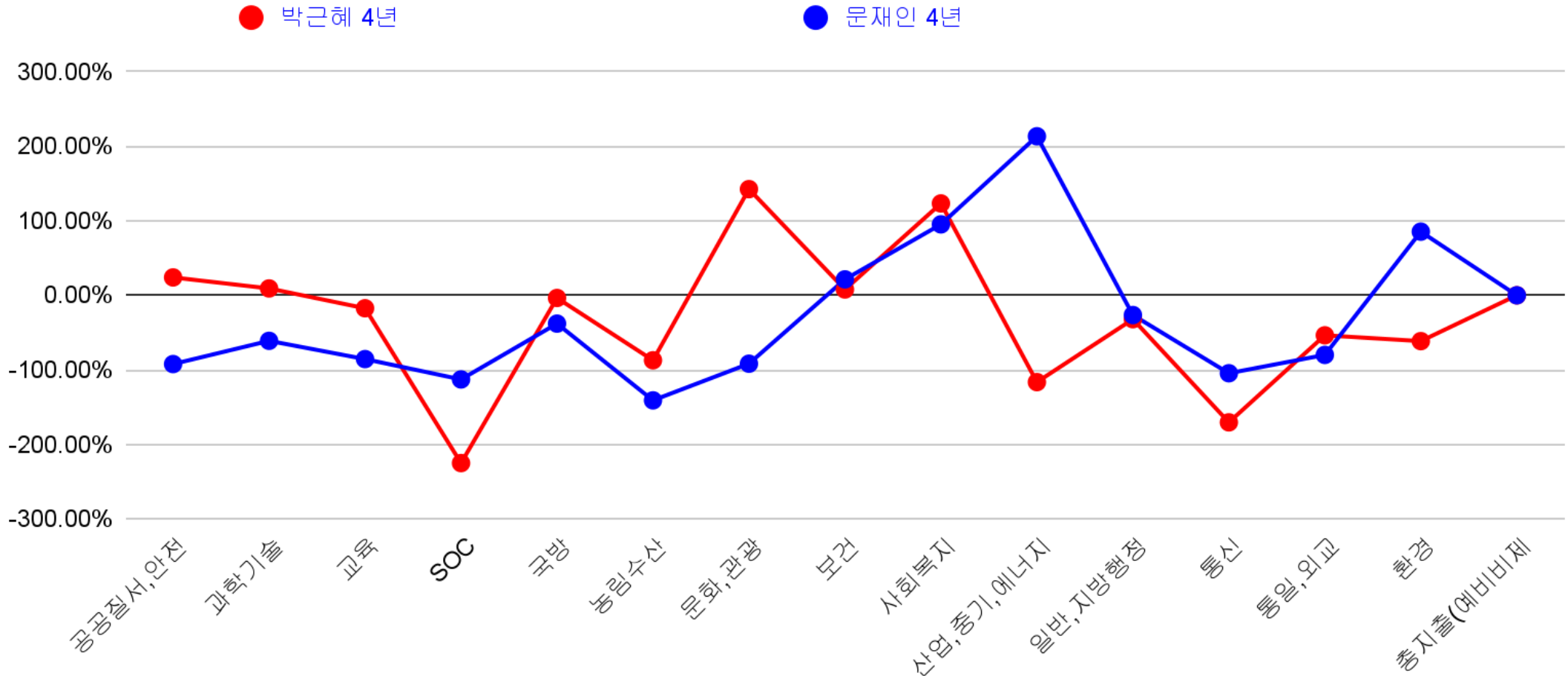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율 (단위: %)

증감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연평균 증감률	문재인 4년 연평균 증감률
공공질서및안전	5.1%	7.3%	3.3%	3.7%	5.2%	5.5%	3.5%	7.0%	4.8%	5.3%
과학기술	2.6%	8.3%	3.1%	3.7%	-0.2%	4.2%	12.8%	9.0%	4.4%	6.4%
교육	1.9%	4.4%	0.5%	7.9%	11.8%	10.1%	2.8%	-2.0%	3.6%	5.5%
교통및물류	-0.6%	7.4%	-2.3%	-6.0%	-17.7%	2.1%	22.5%	11.7%	-0.5%	3.6%
국방	4.3%	5.8%	3.0%	3.1%	7.2%	8.4%	7.4%	5.6%	4.0%	7.1%
국토및지역개발	-9.3%	-5.9%	-14.1%	-9.4%	4.4%	11.8%	-1.2%	25.6%	-9.7%	9.7%
농림수산	1.9%	3.1%	0.5%	1.2%	0.5%	1.5%	7.4%	5.3%	1.6%	3.7%
문화및관광	7.7%	13.1%	8.3%	4.0%	-6.3%	12.2%	10.6%	5.8%	8.2%	5.3%
보건	5.8%	12.6%	1.3%	-1.7%	7.2%	9.2%	11.6%	8.7%	4.4%	9.1%
사회복지	9.6%	8.3%	7.2%	5.5%	12.1%	11.5%	12.2%	10.8%	7.7%	11.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9%	6.8%	-1.0%	-1.5%	1.8%	15.1%	26.4%	20.8%	0.8%	15.6%
예비비	-9.3%	-15.0%	4.8%	-4.8%	0.0%	0.0%	13.3%	152.9%	-6.3%	30.1%
일반·지방행정	2.6%	1.4%	2.6%	6.4%	9.0%	10.9%	3.2%	7.2%	3.2%	7.5%
통신	3.2%	1.9%	-0.5%	-7.1%	0.2%	4.9%	7.6%	7.1%	-0.7%	4.9%
통일·외교	2.3%	6.7%	4.1%	-2.4%	3.5%	7.2%	8.8%	3.5%	2.6%	5.7%
환경	2.5%	5.5%	0.7%	0.8%	-0.3%	7.2%	21.8%	17.8%	2.4%	11.3%
총지출	4.0%	5.5%	2.9%	3.7%	7.1%	9.5%	9.1%	8.9%	4.0%	8.6%
총지출(예비비제외)	4.2%	5.7%	2.9%	3.7%	7.1%	9.5%	9.0%	7.9%	4.1%	8.4%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비교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기능별 변화 표준화 비교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교육, 문화, 복지 비교 (단위: 십억원)

분야	부문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증감액	문재인 4년 증감액	박근혜 4년 증가액 비중	문재인 4년 증가액 비중
교육	고등교육	7,681	8,870	10,745	9,359	9,458	9,674	10,258	11,014	11,327	1,778	1,869	3.0%	1.2%
	교육일반	120	112	102	110	111	126	131	137	138	-10	27	0.0%	0.0%
	유아및초중등교육	41,236	41,145	41,457	43,059	47,149	53,715	59,383	60,413	58,637	5,913	11,488	10.1%	7.3%
	평생·직업교육	733	572	615	658	694	674	877	1,072	1,105	-39	412	-0.1%	0.3%
	소계	49,770	50,700	52,919	53,186	57,412	64,190	70,649	72,634	71,208	7,642	13,795	13.0%	8.8%
문화및관광	관광	1,096	1,232	1,372	1,411	1,554	1,402	1,414	1,349	1,500	457	-54	0.8%	0.0%
	문화및관광일반	255	275	344	317	332	352	363	345	358	76	27	0.1%	0.0%
	문화예술	2,017	2,240	2,361	2,632	2,717	2,720	3,107	3,537	3,723	700	1,006	1.2%	0.6%
	문화재	585	620	689	731	789	802	901	1,091	1,142	204	352	0.3%	0.2%
	체육	1,074	1,046	1,354	1,539	1,502	1,185	1,465	1,696	1,759	428	257	0.7%	0.2%
소계	5,028	5,413	6,120	6,630	6,893	6,461	7,250	8,018	8,482	1,866	1,588	3.2%	1.0%	
보건	건강보험	6,513	6,966	7,744	7,786	7,581	8,217	9,019	10,196	10,769	1,068	3,188	1.8%	2.0%
	보건의료	1,951	1,945	2,281	2,328	2,340	2,413	2,593	2,769	3,319	390	979	0.7%	0.6%
	식품의약품안전	268	322	376	420	434	472	509	557	609	166	174	0.3%	0.1%
	소계	8,732	9,234	10,401	10,534	10,356	11,101	12,120	13,522	14,697	1,624	4,341	2.8%	2.8%
사회복지	공적연금	33,138	36,403	39,661	42,706	44,993	47,801	50,312	55,449	60,041	11,855	15,048	20.2%	9.6%
	기초생활보장	8,560	8,831	9,477	10,131	10,490	11,015	12,705	13,966	15,324	1,930	4,834	3.3%	3.1%
	노동	13,891	14,459	15,516	17,295	18,265	23,810	26,719	30,518	35,657	4,375	17,392	7.5%	11.0%
	노인·청소년	4,464	6,562	9,036	9,421	9,801	11,297	14,256	16,865	19,106	5,337	9,305	9.1%	5.9%
	보훈	4,315	4,458	4,638	4,818	4,975	5,526	5,559	5,735	5,887	660	911	1.1%	0.6%
	사회복지일반	682	744	770	792	829	1,127	1,296	1,421	1,475	147	646	0.3%	0.4%
	아동·보육	4,520	5,716	5,428	5,765	5,923	6,773	8,725	9,192	9,337	1,402	3,415	2.4%	2.2%
	주택	17,473	18,234	18,387	19,438	21,242	23,387	25,731	29,731	33,518	3,769	12,276	6.4%	7.8%
	취약계층지원	1,627	1,799	2,369	2,499	2,608	2,779	3,575	4,143	4,701	981	2,092	1.7%	1.3%
소계	88,671	97,205	105,281	112,866	119,127	133,515	148,877	167,021	185,046	30,456	65,919	52.0%	41.9%	

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교육, 문화, 복지 비교 (단위: %)

분야	부문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박근혜 4년 연평균 증감률	문재인 4년 연 평균 증감률	박근혜 4년 표준화 증감률	문재인 4년 표준화 증감률
교육	고등교육	15.5%	21.1%	-12.9%	1.1%	2.3%	6.0%	7.4%	2.8%	5.3%	4.6%	42.2%	-112.9%
	교육일반	-6.7%	-9.3%	8.0%	0.7%	14.0%	3.7%	4.1%	1.1%	-2.0%	5.6%	-215.7%	-83.5%
	유아및초중등교육	-0.2%	0.8%	3.9%	9.5%	13.9%	10.6%	1.7%	-2.9%	3.4%	5.6%	-25.4%	-83.5%
	평생·직업교육	-22.0%	7.6%	7.0%	5.4%	-2.8%	30.2%	22.2%	3.1%	-1.4%	12.4%	-192.1%	116.4%
	소계	1.9%	4.4%	0.5%	7.9%	11.8%	10.1%	2.8%	-2.0%	3.6%	5.5%	-17.4%	-85.6%
문화및관광	관광	12.3%	11.4%	2.9%	10.1%	-9.8%	0.8%	-4.6%	11.2%	9.1%	-0.9%	173.9%	-275.4%
	문화및관광일반	7.6%	25.3%	-8.0%	4.6%	6.0%	3.3%	-5.1%	3.9%	6.7%	1.9%	91.4%	-191.8%
	문화예술	11.1%	5.4%	11.5%	3.2%	0.1%	14.2%	13.8%	5.2%	7.7%	8.2%	125.8%	-6.8%
	문화재	6.0%	11.1%	6.2%	7.9%	1.6%	12.3%	21.1%	4.6%	7.8%	9.7%	127.4%	36.9%
	체육	-2.6%	29.4%	13.6%	-2.4%	-21.1%	23.6%	15.8%	3.7%	8.7%	4.0%	160.9%	-130.0%
소계	7.7%	13.1%	8.3%	4.0%	-6.3%	12.2%	10.6%	5.8%	8.2%	5.3%	142.5%	-91.8%	
보건	건강보험	7.0%	11.2%	0.5%	-2.6%	8.4%	9.8%	13.0%	5.6%	3.9%	9.2%	-9.3%	22.1%
	보건의료	-0.3%	17.3%	2.1%	0.5%	3.1%	7.5%	6.8%	19.9%	4.7%	9.1%	18.4%	20.9%
	식품의약안전	20.2%	16.7%	11.7%	3.4%	8.7%	7.8%	9.5%	9.3%	12.8%	8.8%	304.1%	11.3%
	소계	5.8%	12.6%	1.3%	-1.7%	7.2%	9.2%	11.6%	8.7%	4.4%	9.1%	7.8%	21.4%
사회복지	공적연금	9.9%	8.9%	7.7%	5.4%	6.2%	5.3%	10.2%	8.3%	7.9%	7.5%	133.2%	-27.9%
	기초생활보장	3.2%	7.3%	6.9%	3.5%	5.0%	15.3%	9.9%	9.7%	5.2%	9.9%	37.7%	44.8%
	노동	4.1%	7.3%	11.5%	5.6%	30.4%	12.2%	14.2%	16.8%	7.1%	18.2%	103.1%	289.5%
	노인·청소년	47.0%	37.7%	4.3%	4.0%	15.3%	26.2%	18.3%	13.3%	21.7%	18.2%	614.9%	288.2%
	보훈	3.3%	4.0%	3.9%	3.3%	11.1%	0.6%	3.2%	2.7%	3.6%	4.3%	-17.9%	-122.2%
	사회복지일반	9.0%	3.5%	2.9%	4.7%	35.9%	15.0%	9.7%	3.8%	5.0%	15.5%	29.6%	209.3%
	아동·보육	26.5%	-5.0%	6.2%	2.7%	14.4%	28.8%	5.4%	1.6%	7.0%	12.1%	99.8%	107.5%
	주택	4.4%	0.8%	5.7%	9.3%	10.1%	10.0%	15.5%	12.7%	5.0%	12.1%	30.4%	108.2%
	취약계층지원	10.6%	31.7%	5.5%	4.4%	6.6%	28.6%	15.9%	13.5%	12.5%	15.9%	293.2%	220.3%
소계	9.6%	8.3%	7.2%	5.5%	12.1%	11.5%	12.2%	10.8%	7.7%	11.6%	123.3%	95.2%	

4) 예산의 성질별(비목별) 분류 (단위: 십억원)

목명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총합계	512,250	557,987
자치단체이전	177,900	184,667
민간이전	100,158	111,691
용자금	39,265	46,470
인건비	42,377	43,732
연구개발출연금	22,593	25,386
일반출연금	19,366	22,919
운영비	20,886	22,027
보전금	19,918	20,688
상환지출	16,980	18,329
유형자산	16,559	16,927
건설비	13,967	15,345
출자금	8,564	10,597
예비비및기타	4,164	9,344
연구용역비	2,998	3,239
해외이전	1,957	2,080
건설보상비	1,542	1,521
직무수행경비	1,016	1,032
안보비	690	746
여비	717	689
특수활동비	254	238
업무추진비	200	190
무형자산	58	95
지분취득비	123	36
전출금등	0	0



	20년 본예산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고용부담금		1,739	1,821
구호및교정비		142	141
민간경상보조		19,112	20,807
민간위탁사업비		4,911	5,733
민간자본보조		2,035	2,246
법정민간대행사업비		1,525	1,785
보험금		18,547	22,473
연금지급금		51,348	55,839
이차보전금		799	846

국가는 공동구매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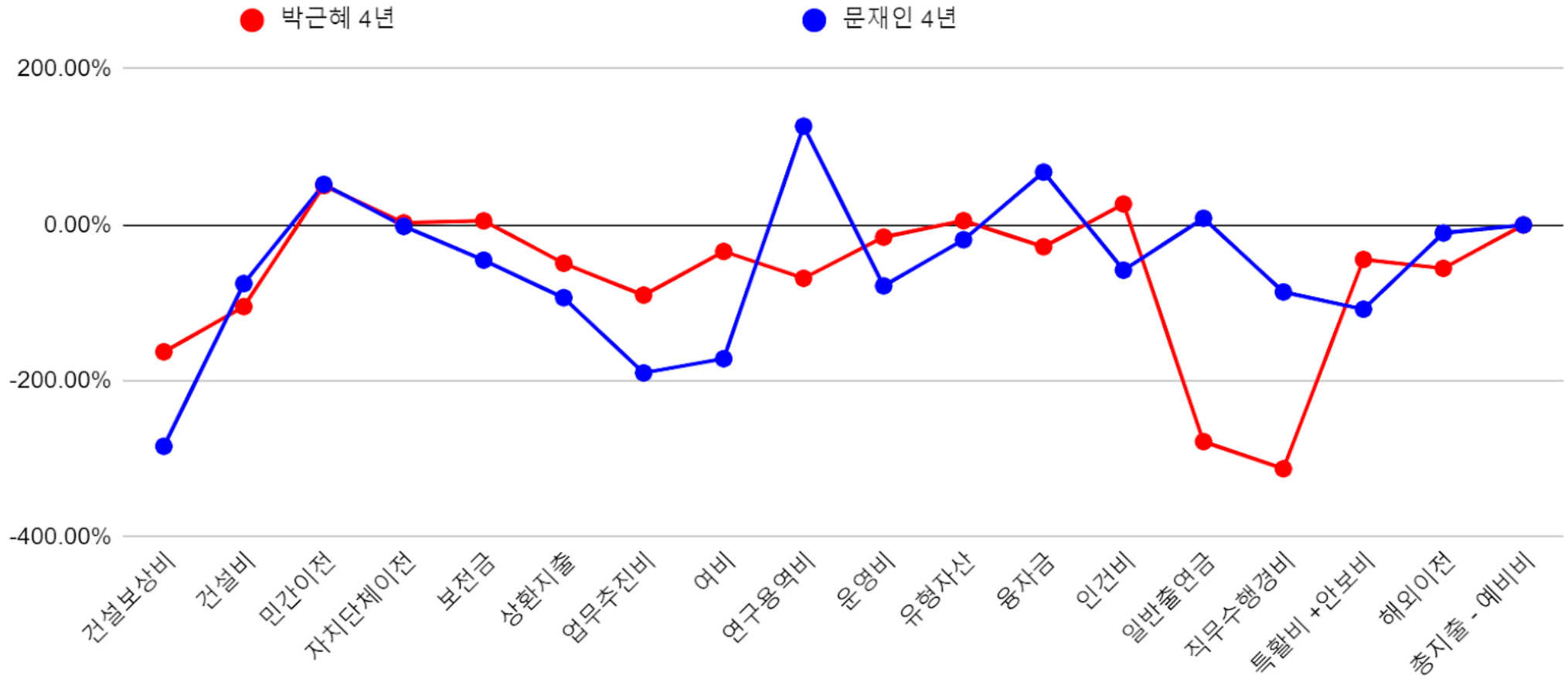
4) 예산의 성질별(비목별) 분류 (단위: 십억원)

증감액	13년	17년	21년	박근혜 4년 증감액	문재인 4년 증감액	박근혜 4년 증감액 비중	문재인 4년 증감액 비중
건설보상비	2,680	2,059	1,521	-621	-538	-1.1%	-0.3%
건설비	14,454	12,982	15,345	-1,472	2,363	-2.5%	1.5%
무형자산	42	65	95	24	29	0.0%	0.0%
민간이전	54,833	72,747	111,691	17,914	38,944	30.6%	24.7%
자치단체이전	113,435	134,054	184,667	20,619	50,613	35.2%	32.1%
보전금	13,815	16,430	20,688	2,614	4,258	4.5%	2.7%
상환지출	15,538	16,122	18,329	583	2,207	1.0%	1.4%
업무추진비	222	207	190	-15	-17	0.0%	0.0%
여비	667	719	689	52	-30	0.1%	0.0%
연구용역비	1,846	1,824	3,239	-22	1,416	0.0%	0.9%
예비비및기타	4,009	3,747	9,344	-262	5,597	-0.4%	3.6%
운영비	16,608	18,751	22,027	2,143	3,276	3.7%	2.1%
유형자산	10,700	12,733	16,927	2,033	4,193	3.5%	2.7%
융자금	26,806	29,336	46,470	2,530	17,134	4.3%	10.9%
인건비	28,465	35,679	43,732	7,214	8,053	12.3%	5.1%
일반출연금	29,473	16,292	22,919	-13,181	6,627	-22.5%	4.2%
직무수행경비	1,798	894	1,032	-904	139	-1.5%	0.1%
특활비+안보비	851	894	984	43	91	0.1%	0.1%
해외이전	1,506	1,537	2,080	31	543	0.1%	0.3%
총지출	341,968	400,546	557,987	58,578	157,441	100.0%	100.0%

4) 예산의 성질별(비목별) 분류

증감률	박근혜 4년 연평균 증감률	문재인 4년 연평균 증감률	박근혜 4년 연평균 증감률 표준점수(z-score)	문재인 4년 연평균 증감률 표준점수(z-score)
건설보상비	-6.4%	-7.3%	-162.9%	-283.9%
건설비	-2.6%	4.3%	-104.9%	-75.2%
민간이전	7.3%	11.3%	50.2%	51.9%
자치단체이전	4.3%	8.3%	2.6%	-1.8%
보전금	4.4%	5.9%	5.2%	-45.3%
상환지출	0.9%	3.3%	-49.3%	-93.5%
업무추진비	-1.7%	-2.1%	-90.2%	-189.8%
여비	1.9%	-1.1%	-34.2%	-171.7%
연구용역비	-0.3%	15.4%	-68.4%	126.5%
운영비	3.1%	4.1%	-15.8%	-78.2%
유형자산	4.4%	7.4%	5.4%	-19.2%
융자금	2.3%	12.2%	-28.2%	67.7%
인건비	5.8%	5.2%	26.7%	-58.1%
일반출연금	-13.8%	8.9%	-277.8%	8.5%
직무수행경비	-16.0%	3.7%	-312.8%	-86.1%
특활비 +안보비	1.2%	2.4%	-44.4%	-108.2%
해외이전	0.5%	7.9%	-55.7%	-10.4%
총지출 -예비비 -무형자산	4.1%	8.4%	0.0%	0.0%

4) 예산의 성질별(비목별) 분류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얼마일까?

깜짝 퀴즈

수학과, 철학과, 회계학과 면접장
“1+1은 무엇인가 ” 질문의 정답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1. 예산안기준
2. 본예산기준
3. 추경예산기준
4. 결산기준

총 4가지 다른 숫자 가능?

‘예산’이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기금지출은 불포함
관례적으로는 기금까지 포함.

4 X 2 = 8가지 가능?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dBrain 상으로는 보건분야는 불포함
관례적으로는 보건분야 까지 포함.

8 X 2 = 16가지 가능?

그런데 각 부처의 설명자료는 보통 총계기준
기재부의 예산 자료는 보통 총지출 기준

16 X 2 = 32가지 가능?



여기까지는 '총지출' 기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발명품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사용하는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는 주택부문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그런데 국제기준(Imf GFS 등)에는 주택부문은 복지지출이 아님.

또한, 건강보험 지급액이 불포함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지출이라기 보다는 ‘보험지급’ 자기가 낸 돈 받아가는거(국민연금은)

물론 국제비교 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액은 복지지출에 포함.

주택부문 및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 여부에 따라 경우의 수 발생

총지출과 통합재정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정부의 분야별(복지·경제·국방 등) 재정지출 규모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부가 도입('05년)한 개념

구분	총수입·총지출		통합재정수입·지출		
도입 시기	'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 결산에는 '10회계연도부터 도입		'79년부터(연간 실적) + 분기별('94년~), 월별('99년~)		
목적	재정 규모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활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규모 집계 등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작성 방식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 거래와 내부 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차이점	(용자) 회수 및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 총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작성		(용자) 순 용자를 지출로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 각각의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통합재정수입,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 용자에 반영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 및 순 용자
		일반 수입 + 용자 회수 + 기특 수입 총계	일반 지출 + 용자 지출 + 기특 지출 총계	일반 수입 + 기특 영업 수지 흑자	일반 지출 + 순 용자 + 기특 영업 수지 적자

IMF 통합재정지출

- 1986 현금주의 기반 GFS 기준
- 2001 발생주의 기반 GFS 기준

UN SNA 기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통계 작성

우리나라 보건 복지 지출 프로그램 전체 (단위: 백만원)

부문	프로그램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운영	10,195,623	10,768,843
건강보험 요약		10,195,623	10,768,843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확충	482,851	527,442
	공용재산취득(보건복지부)	0	0
	국립공주병원	15,937	16,351
	국립나주병원	20,830	21,388
	국립마산병원	19,569	19,797
	국립목포병원	11,680	12,051
	국립부곡병원	19,910	20,023
	국립정신건강센터	40,416	40,742
	국립춘천병원	14,652	15,115
	국민건강생활실천	479,565	536,734
	보건산업육성	585,552	845,792
	보건의료서비스지원	82,198	151,061
	소록도병원	8,534	8,580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282	281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36,170	246,127
	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0	253,129
	질병관리본부지원	709,420	561,000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41,846	43,758
보건의료 요약		2,769,412	3,319,371
식품의약품안전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0	0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110,253	133,892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12,619	16,257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7,619	8,276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70,228	76,495
	식의약품행정지원	224,897	238,148
	식품기준규격관리 선진화	6,920	7,164
	식품안전성제고	54,782	51,353
	위해관리 선진화	22,844	22,178
	의료기기안전성제고	12,852	15,038
	의약품안전성제고	29,281	31,748
	지방청운영	4,525	8,044
식품의약품안전 요약		556,820	608,593
보건 분야 총지출액		13,521,855	14,696,807

부문	프로그램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185,332	192,853
	고용안전망확충	13,822,096	15,116,362
	고용창출및훈련	5,664,622	7,873,096
	고용평등증진	2,078,631	2,053,960
	장애인고용증진	525,181	603,901
고용 요약		22,275,862	25,840,172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517,661	538,515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4,357	8,351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7,122	10,506
고용노동일반 요약		529,140	557,372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7,418,579	18,898,695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83,395	71,831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29,786	531,170
	국민연금운영	94	92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6,603,440	29,172,591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277,805	298,743
	군인연금(연금정책)	3,465,659	3,542,643
	군인연금기금(기금운영비)	468	365
	대부사업운영	1,490,530	1,522,5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063,803	1,125,3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3,845,545	4,209,63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59,528	55,838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610,223	611,229
	차입금이자상환	285	123
공적연금 요약		55,449,140	60,040,821

우리나라 보건 복지 지출 프로그램 전체 (단위: 백만원)

부문	프로그램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12,335,464	13,336,418	
	기초주거생활보장	1,630,475	1,987,925	
기초생활보장 요약		13,965,939	15,324,343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416,548	450,818	
	고용노동행정지원(차입금이자)	2	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55,691	961,039	
	노사정책	31,376	53,954	
	산업재해예방	510,662	1,069,234	
노동 요약	산재보험	6,099,013	6,724,416	
	노동 요약	7,713,292	9,259,461	
노인	노인생활안정	14,895,001	16,861,192	
	노인의료보장	1,737,336	2,011,079	
노인 요약		16,632,337	18,872,271	
보훈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처)	1,109	177	
	기금증식	19,326	18,206	
	보훈단체지원	51,350	32,497	
	보훈선양	156,764	199,055	
	보훈심사및보상	4,375,497	4,495,260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82,973	93,941	
	보훈의료복지	768,092	775,314	
	보훈행정	120,821	123,918	
	복권기금운영(보훈복지법정지원)	53,845	51,466	
	생활안정지원	55,453	60,634	
	제대군인지원	49,292	36,140	
	보훈 요약		5,734,522	5,886,608
	사회복지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89	91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29,971	38,420	
사회복지기반조성		1,020,862	985,494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370,482	450,783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86	86	
사회복지일반 요약		1,421,490	1,474,874	

부문	프로그램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아동·보육	민간보육시설지원	3,250	1,400
	보육지원강화	5,872,783	5,959,703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84,181	306,753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352,437	2,290,385
	아동·보육 요약	8,512,651	8,558,241
여성·가족·청소년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661,531	737,533
	성평등정책기반강화및여성경제활동지원	75,471	87,936
	여성·아동인권보호	85,434	91,051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6,914	27,283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13,391	22,551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232,305	233,754
여성·가족·청소년 요약		1,095,046	1,200,108
주택	구입·전세자금	9,399,200	9,900,000
	도시재생활성화	941,816	957,323
	분양주택등지원	294,978	490,727
	임대주택지원(용자)	11,501,777	13,023,592
	임대주택지원(출자)	4,527,135	6,325,562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3,066,492	2,821,232
	주택 요약	29,731,398	33,518,436
취약계층지원	국립재활원	60,238	50,866
	노숙인의사상자지원	47,421	50,823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273,083	374,915
	일자리지원	300,096	356,866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3,276,022	3,678,36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3,432	1,400
취약계층지원 요약		3,960,292	4,513,230
복지 분야 총지출액		167,021,109	185,045,937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정부 예산 보도의 시작은 ‘예산’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확한 단서 없이 “무슨 무슨 예산은 1억 원이다”라는 서술은 부정확한 기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중의적이고 추상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산안과 예산은 다르다. 예산안이 의회심의를 통과하면 예산이 된다. 그리고 본예산 금액과 추경 금액, 그리고 결산액은 각각 다르다. 이 정도는 다들 구분한다고? 안타깝게도 같은 기사에 결산 기준 금액과 예산 기준 금액이 혼용된 기사는 매우 많다.

정부 재정 통계는 과거 자료는 결산 금액이, 현재 자료는 예산 금액이 표시된 통계도 있고, 둘 다 예산 기준 금액이 표시된 통계도 있다. 정부 자료는 작은 글씨로 이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용한 기사는 별다른 표시 없이 결산 자료와 예산 자료가 섞여 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금액을 빼거나 나눠서 증감액, 증감률 등을 산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은 1억 원이다”라는 표현보다 “예산안 금액은, 본예산 금액은, 추경예산액은, 결산액은...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예산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쓴 기사는 오히려 소수다. 관행적으로 기사에서 쓰는 '예산'이란 단어와 교과서적인 의미의 정확한 '예산'이라는 개념은 다르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기사에서 쓰는 '예산'은 그냥 정부 지출 금액을 뜻한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지출한 금액을 '20년도 보건복지 예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과서적 개념으로 예산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액의 합이다. 즉, 기금 지출액은 제외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558조 원하고 말하면, 교과서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문건에 존재하는 예산이라는 단어는 거의 기금 지출을 제외한 교과서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지출액은 2021년 본예산 총 기준 약 200조 원이다. 그런데 교과서적인 의미의 2021년 보건복지 분야 본'예산'액은 73조 원이다.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 지출액을 제외하면, 반토막 이하로 준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통계에 있는 예산 금액과 기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금액을 혼용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지출액이라는 표현을 쓰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총액이 궁금한 독자는 많아도 기금 지출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한 사회복지 예산 금액만이 궁금한 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즉,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2020년 사회복지 예산 총액'을 물어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다양한 금액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다.

첫째, "난 교과서적인 개념을 통해 자료를 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기금을 제외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액

둘째, "아마도 저 기자가 실제로 궁금한 것은 기금까지 포함한 복지 분야 지출액일 거야"라고 판단하고 기금까지 포함한 복지 분야 지출액

셋째, "아마도 저 기자가 물어본 것은 보건복지 분야 지출액이겠지" 보건 분야 지출액 + 복지 분야 지출액

넷째, "사회복지 예산은 보건복지 예산을 뜻 할지도 몰라" 기금을 제외한 보건 분야 예산액 + 기금을 제외한 복지 분야 예산액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보건복지 분야 본예산 지출액'이라는 모범 질문을 보건복지부에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전체 지출액과는 차이가 크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도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에 아무리 질문을 잘해도 우리나라 전체 보건복지 분야 예산 총액 자료를 얻을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에 해야 하는 질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지?

첫째, 기준을 파악하자. 예산안 기준, 본예산 기준, 추경 기준, 결산 기준

둘째, 기금 포함 여부를 파악하자. 특히, '예산'이라는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구태여 기금 지출 액수를 제거하고 기사를 쓰고 싶지 않다면, 그냥 '지출액'이라고 표현하자.

셋째, 부처별 지출액과 분야별 지출액을 구별하자. 일반적으로 독자가 알고 싶은 자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라 보건 분야 또는 복지 분야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액이 궁금하지 보건복지부 지출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넷째, 총계와 총지출을 구별하자. 총계라는 단어와 총지출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합계가 총계가 아니고 전체 지출이 총지출이 아니다.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Concept)이다. 재정 통계를 보면 이 수치가 총계 기준인지 총지출 기준인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21년 복지 예산은?”이란 질문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각각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자료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의지도 반영될 수도 있다.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원하면 작은 숫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가장 모범이 되는 정확한 표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액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약 200조 원이다.”

여기에는 200조 원 말고는 다른 숫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 📌

전문가와 비 전문가 차이는?

- 로데이터(raw data)를 직접 보고 확인해야
- 데이터 크리티시즘
- 데이터의 기준을 확인해야.
혼돈된 단위가 표시 없이 쓰인 자료가 의미 없는 것처럼
기준 데이터 표시 없이 쓰인 자료도 의미 없어

최소한 이것만은 알자

- 예산안, 예산, 추경예산, 결산
- 지출액에 기금 포함 또는 불포함
- 총지출 기준(기재부), 총계 기준(기재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
- GDP 비교 또는 국제 비교는 총지출이 아니라 통합재정지출 등 국제비교 기준

3.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이란

나라살림 vs. 가정살림 정 반대인 부분이 많아

재정과 나라살림, 1인당 부채?

1400만원 빚있는데, 또 빚내 100만원 준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작년 국가부채 사상 최대 1743조, 재정수지 적자도 54조로 최악 與野, 재정 고려않고 총선 올인... 수십조 드는 재난지원금 경쟁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하고, 재정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별다른 경제 위기가 없던 지난해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진짜 위기'를 맞아 적자와 빚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 내걸어 나라 곳간은 더욱 축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4조원 증가한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대인 2009년의 43조2000억원 적자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12조원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성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에 매년 40조원가량 흑자를 내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좀처럼 적자가 나지 않는데, 작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

가 워낙 큰 탓에 통합재정수지까지 적자가 났다.

재정 적자가 늘면서 국가 채무도 동반 급증했다. 중앙정부 채무(699조원)와 지방정부 채무(29조8000억원)를 합친 국가 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늘었다.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돈이 1409만원 꼴이다. 여기에 장차 공무원과 군인 연금으로 나갈 돈까지 합친 국가 부채는 1743조6000억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규모(1914조원)에 가까워졌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막판 선심성 경쟁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재정 건전성 감옥'이라는 공든 탑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 정부가 9조1000억원을 들여 전체 가구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맞받으며 25조원 규모로 판을 키웠다. 이에 김세라 여당인 민주당도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13조원을 쓰겠다고 나섰다. 최규민·안종현 기자 A3면에 계속



당신이 갚아야 할 나랏빚 이만큼...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48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이 1409만원 선으로 불어난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만큼 1만원짜리 지폐 1409장을 쌓았더니 두 손으로 잡기 버거운 정도로 많았다.

고은오 기자

쉬운 비유도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다. 많은 언론에서 나라 ‘곳간’이 비었다 또는 ‘거덜’났다고 표현한다. 정부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마치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을 채워 놓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세금을 걷을까?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가뭄이나 흉년에 대비하고자 정부 곳간을 채워 놓고자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다. 재정학의 아버지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돈을 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얼마나 공급해야 할까?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열에는 긴축재정을, 불황에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 곳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펌프가 더 어울린다.

기자에게 아마추어리즘은 필요한 덕목이다. 적절한 단순화와 쉬운 비유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유가 올바른지는 전문가에 물어보고 확인하자. 전문가는 멘트를 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는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된 ‘프로 질문러’야 하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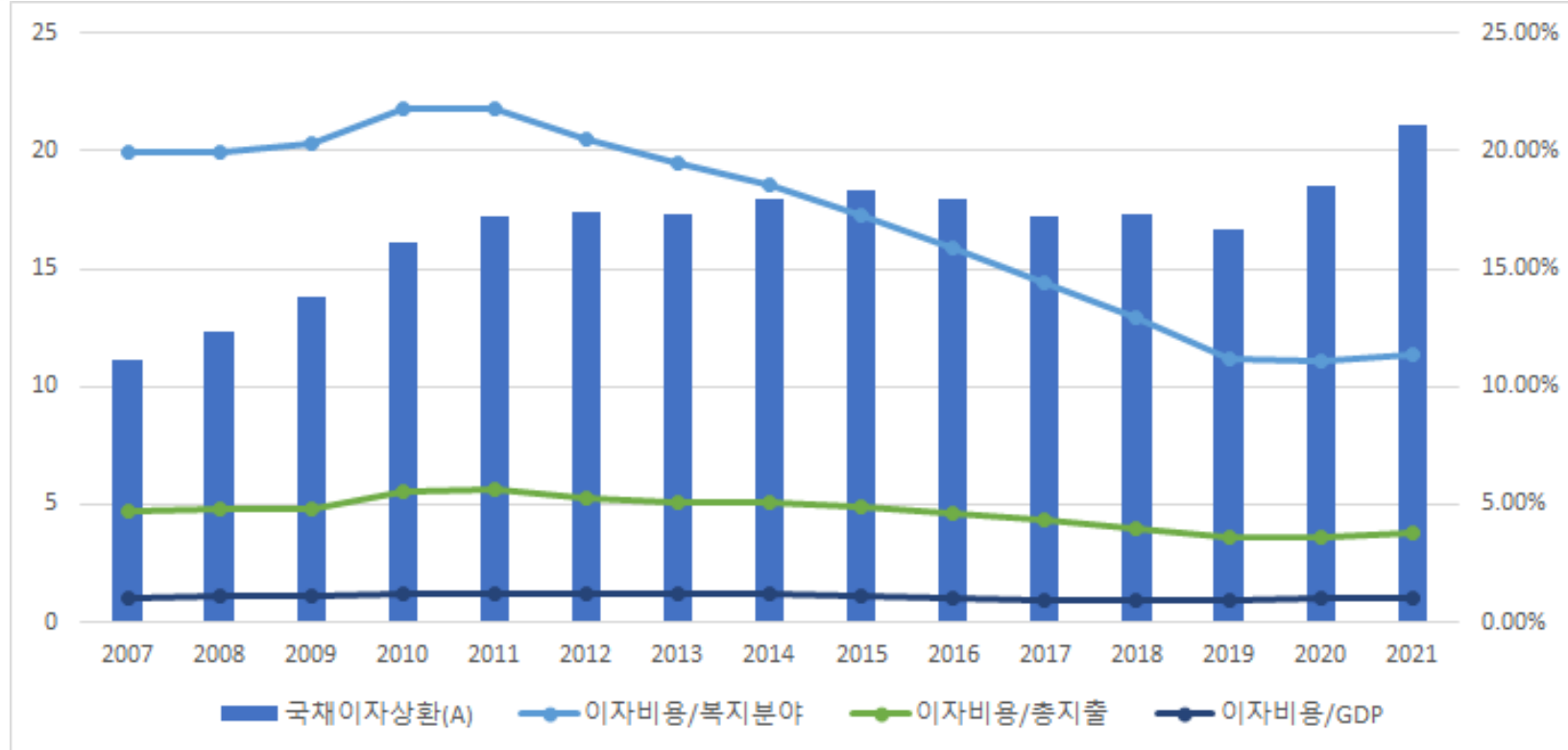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7
◇적자성채무		227.4	256.4	295.9	324.9	341.9	350.5
	-일반회계적자보전	172.9	200.6	240.1	271.3	289.6	300.4
	-공적자금상환	46.9	48.7	49.4	48.5	47.6	45.3
	-기타 적자성	7.6	7.1	6.4	5.1	4.7	4.8
◇금융성채무		236.7	246.8	260.6	267	285.4	301.3
	-외환시장안정	171	185.2	198.3	209.8	222.3	234.9
	-국민주택채권	51.3	52.8	59.3	64	69.4	73.3
	-기타 금융성	14.4	8.8	3	△6.8	△6.3	△6.9
◇지방정부순채무		25.7	30.1	34.9	35	32.8	28.9

항상 사상 최대! 절대값보다 중요한 건?

국채이자/GDP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채이자비용	11.1	12.3	13.8	16.1	17.2	17.4	17.3	18	18.3	18	17.2	17.3	16.7	18.5	21.1
복지분야															
지출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05.3	112.9	119.1	133.8	148.9	167	185.3
총지출	237	257.2	284.5	292.8	309.1	325.4	342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5.8
GDP	1,090	1,154	1,205	1,323	1,389	1,440	1,501	1,563	1,658	1,741	1,836	1,898	1,919	1,930	2,023
이자비용/복지지출	19.90%	19.90%	20.30%	21.80%	21.80%	20.50%	19.50%	18.60%	17.30%	15.90%	14.40%	12.90%	11.20%	11.10%	11.40%
이자비용/총지출	4.70%	4.77%	4.85%	5.50%	5.56%	5.34%	5.05%	5.07%	4.87%	4.65%	4.29%	4.04%	3.56%	3.61%	3.80%
이자비용/GDP	1.02%	1.06%	1.14%	1.22%	1.24%	1.21%	1.15%	1.15%	1.10%	1.03%	0.94%	0.91%	0.87%	0.96%	1.04%



기축통화 vs. 비기축통화 채무비율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2017년/2018년)

비율	기축통화 국가	비기축통화 국가
130% 이상	일본 (222.1) ¹⁾ , 그리스 (188.7) ¹⁾ , 이탈리아(148.0), 포르투갈(140.6)	
110~ 130%	프랑스 (122.4), 벨기에 (120.1), 스페인(113.3), 영국(112.9)	
80~ 110%	미국 (107.3), 오스트리아 (91.5), 슬로베니아(82.7)	캐나다(93.7), 헝가리(87.8)
50~ 80%	아일랜드(77.2) ¹⁾ , 핀란드(68.9), 독일(68.3), 네델란드(64.6), 슬로바키아(56.3)	이스라엘 (71.0) ¹⁾ , 폴란드 (66.1), 아이슬란드(63.4) ¹⁾ , 멕시코(53.1) ¹⁾
50% 미만	라트비아 (44.2), 리투아니아 (41.2), 룩셈부르크(28.8), 에스토니아(12.9),	뉴질랜드 (49.9) ¹⁾ , 스웨덴 (48.0), 덴마크(47.4), 노르웨이(45.6), 한국(43.2)¹⁾ , 스위스 (42.9) ¹⁾ , 호주 (42.5), 체코 (40.3), 터키 (35.2) ¹⁾ , 칠레(29.6) ¹⁾
평균	95.6%	53.7%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2019.11.14. 발표)

주1: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는 2017년 수치임

기축통화 vs. 비기축통화 채무비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장(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어서 국가역할이 커지고 복지제도가 성숙될 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 둘째, 실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여 비율을 산출 한다는 점
 -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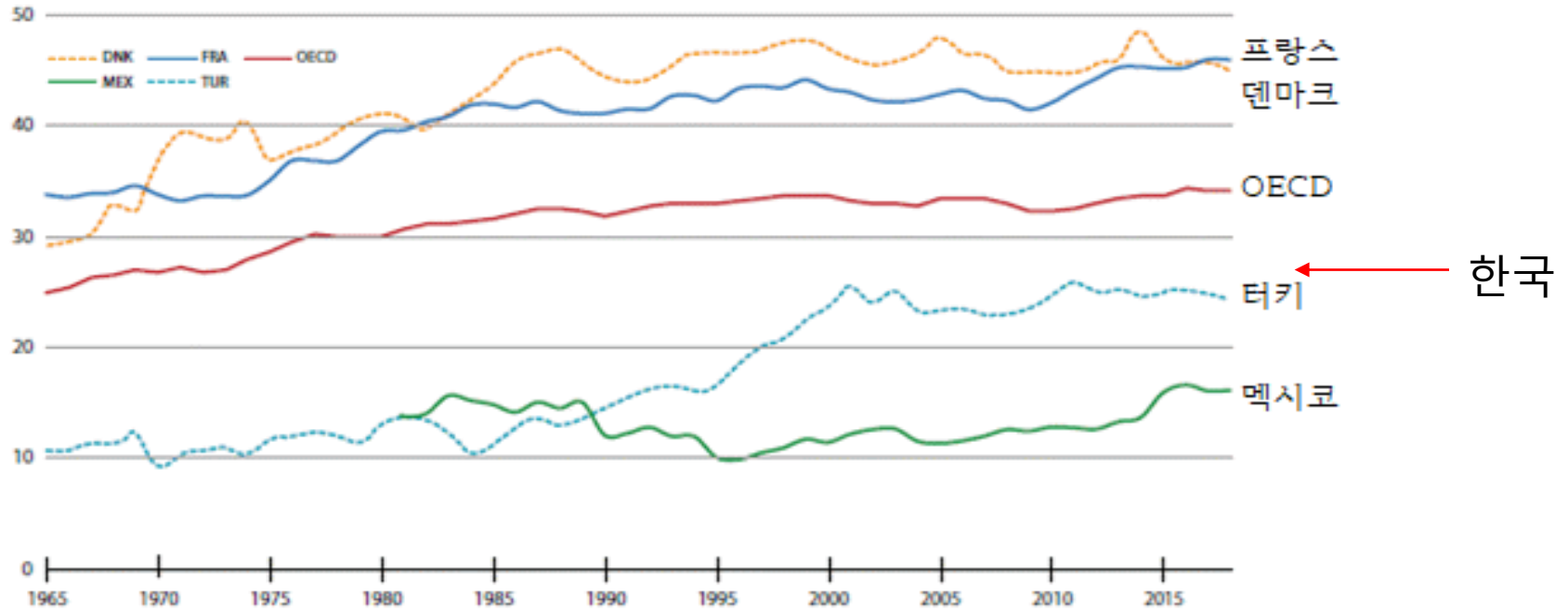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순부채와 총부채 (GDP대비 비율, %p)

순부채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총부채- 순부채	총부채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Norway	-105.5	1	-111.3	1	151.3	Norway	41.3	7	40	4
Japan	154.9	29	177.1	29	89.1	Japan	238	29	266.2	29
Canada	25.9	10	46.4	12	68.2	Canada	88.6	21	114.6	22
Finland	24.5	9	32.0	9	35.9	Finland	59	15	67.9	15
Brazil	55.7	19	68.5	19	32.9	Brazil	89.5	22	101.4	20
Sweden	3.2	2	9.2	2	32.7	Sweden	34.8	5	41.9	5
Korea	11.5	6	18.0	5	30.4	Korea	41.9	8	48.4	7
New Zealand	9.0	4	21.3	6	26.7	New Zealand	31.5	4	48	6
United States	84.1	24	106.8	24	24.4	United States	108.7	26	131.2	26
Austria	47.8	17	61.0	18	23.8	Austria	70.3	19	84.8	19
Australia	27.6	11	39.4	10	21.0	Australia	46.3	11	60.4	12
Switzerland	21.3	8	28.0	8	20.7	Switzerland	42.1	9	48.7	8
Denmark	10.4	5	14.8	4	19.7	Denmark	29.4	2	34.5	2
Germany	41.1	14	54.1	15	19.2	Germany	59.5	16	73.3	16
Chile	7.9	3	14.7	3	18.1	Chile	27.9	1	32.8	1
Spain	81.3	23	106.9	25	16.1	Spain	95.5	23	123	25
Belgium	85.8	25	103.8	23	13.9	Belgium	98.7	25	117.7	23
Italy	123.0	28	148.8	28	13.0	Italy	134.8	28	161.8	28
Czech Republic	18.3	7	27.3	7	11.8	Czech Republic	30.2	3	39.1	3
Netherlands	41.7	15	48.1	13	11.2	Netherlands	48.4	12	59.3	10
United Kingdom	75.4	22	98.1	22	9.9	United Kingdom	85.4	20	108	21
Iceland	27.7	12	42.0	11	9.7	Iceland	37	6	51.7	9
Mexico	44.9	16	56.7	16	8.8	Mexico	53.7	13	65.5	14
France	89.4	26	110.0	26	8.7	France	98.1	24	118.7	24
Hungary	59.3	21	70.4	20	7.0	Hungary	66.3	18	77.4	18
Portugal	111.4	27	130.3	27	6.9	Portugal	117.7	27	137.2	27
Poland	39.5	13	53.5	14	6.5	Poland	46	10	60	11
Ireland	49.6	18	58.6	17	5.1	Ireland	57.3	14	63.7	13
Israel	57.2	20	73.6	21	2.9	Israel	60	17	76.5	17

국민부담률과 노인부양비

국민부담률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프랑스	20.66	21.52	21.86	19.61	21.29	23.22	24.71	25.40	26.03	28.22
덴마크	19.05	20.92	22.25	22.70	23.14	22.61	22.22	22.81	25.29	27.92
OECD	15.36	16.21	16.88	16.61	17.55	18.67	19.68	20.67	22.05	23.61
터키	8.20	8.37	8.30	7.19	7.18	8.73	10.56	10.18	10.61	11.54
멕시코	9.58	9.00	8.34	7.59	7.29	7.29	7.62	9.06	9.63	10.22

노인부양비



4. 재정과정

재정과정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은 한다.

국회의 법과 예산의 권한의 차이는?

예산감시

국회의원도 모르는 예산 나눠먹기의 비밀... 심사없는 예산증액



황일송

2014년 12월 23일 07시 15분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가 증액한 예산 3조 원을 사이 좋게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양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일괄 분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두 거대 정당이 밀실 담합을 통해 관행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는 올해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복수의 의원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375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 감액 심사로 총 3조 6천억 원을 삭감한 뒤, 국회 차원에서 다시 3조 원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증액하는 예산은 얼마나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국회가 이번에 3조 원의 예산을 늘리는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조 원 규모로 증액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동의를 얻긴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일률적으로 알아서 ‘나눠먹는’ 구조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올해 처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 (국회 예결위는) 감액만 하고 증액(심사)은 없어요.

기자 : 증액은 누가하나요?

박완주 의원 : 증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심사 정도를 했고, 그래서 증액을 3조 원 정도 했는데 3조 원의 증액분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의석수를 가지고 나눕니다. 증액분을 어떻게 것이 아니고 의석수 비율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1.7조 원이요.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도깨비 방망이 '보류'

본회의 국회의장

“기재부는 모두 동의하나?”

국회 증감내역

연도		정부안	최종안	차액 (순증감액)	감액	증액	차액 비율	감액 비율	증액 비율
이명박	총지출	1,553,766,741	1,553,781,817	15,076	-17,620,023	17,635,099	0.001%	-1.13%	1.13%
	예산	1,091,077,362	1,097,539,320	6,461,958	-9,031,702	15,493,660	0.59%	-0.83%	1.42%
	기금	462,689,379	456,242,497	-6,446,882	-8,588,321	2,141,439	-1.39%	-1.86%	0.46%
박근혜	총지출	1,521,066,978	1,518,153,942	-2,913,036	-17,835,779	14,922,743	-0.19%	-1.17%	0.98%
	예산	1,047,408,669	1,049,529,244	2,120,576	-10,077,561	12,198,137	0.20%	-0.96%	1.16%
	기금	473,658,309	468,624,698	-5,033,611	-7,758,217	2,724,606	-1.06%	-1.64%	0.58%
문재인	총지출	899,473,035	898,409,089	-1,063,946	-9,232,500	8,168,555	-0.12%	-1.03%	0.91%
	예산	622,337,965	625,156,661	2,818,696	-4,187,092	7,005,788	0.45%	-0.67%	1.13%
	기금	277,135,070	273,252,428	-3,882,642	-5,045,409	1,162,767	-1.40%	-1.82%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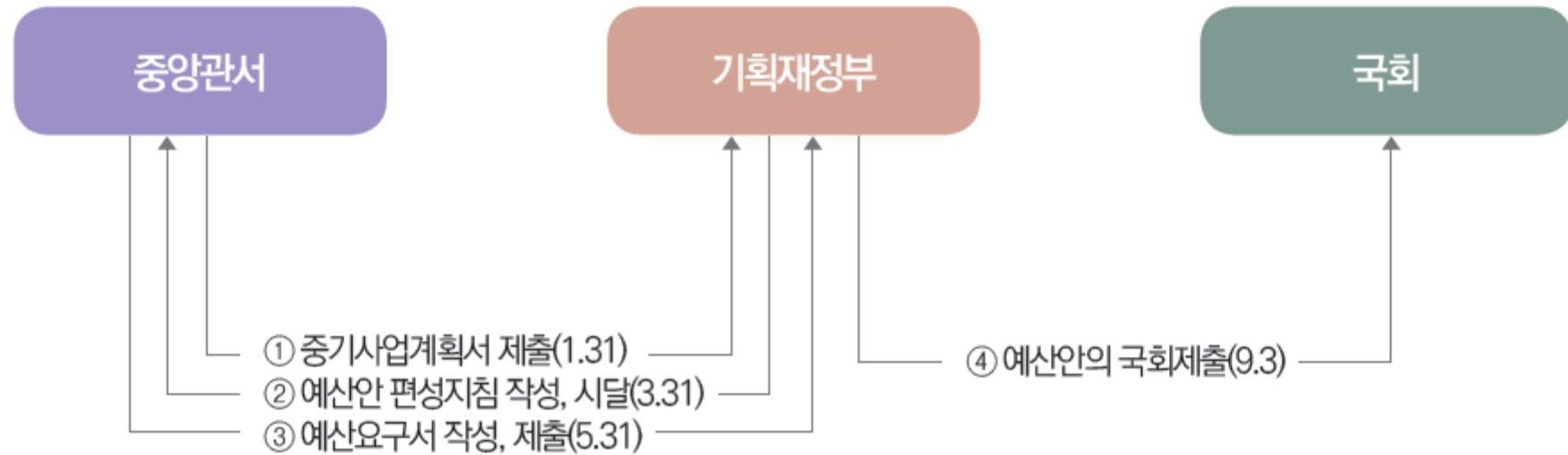
	예산 심의연도	여당	야당	비고
이명박 정부	2009~2013 5년간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여대야소
박근혜 정부	2014~2017 4년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014~2016 여대야소 2017 여소야대
문재인 정부	2018~2019 2년간	민주당	자유한국당	여소야대

국회감액의 실제 국회 감액도, 증액도 모두 기재부가

소관	회계	세부사업명	정부안	예결위 감액	실제 절감액	비고
기획재정부	기금	국고채이자상환	19,052,735	-900,233	0	이율 등 예측치 변경 실제 지출액 감소
행정안전부	예산	보통교부세	48,319,262	-716,627	0	지방소비세 인상 차등 실제 지출액 감소
교육부	예산	보통교부금	54,168,686	-486,406	0	세수추계 등 예측치 변경 실제 지출액 감소
인사처	기금	퇴직급여	14,477,129	-400,000	0	공무원연금 지급 추계변동 실제 지출액 감소
농림식품부	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577,500	-324,200	0	쌀값 인상에 따른 추계변경 실제 지출액 감소
복지부	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23,289,300	-270,000	0	국민연금 지급 추계변경 실제 지출액 감소
고노부	기금	구직급여	7,409,316	-226,533	-226,533	실제 지출액 감소
국토부	기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277,200	-127,200	-2,544	실제 지출액 감소 효과 있으나 유자 사업으로 통계적 과장
국토부	기금	국민임대(유자)	896,400	-101,200	-2,024	실제 지출액 감소 효과 있으나 유자 사업으로 통계적 과장
금융위원회	예산	산업은행 중대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500,000	-100,000	-100,000	실제 지출액 감소
국토부	기금	국민임대출자	433,752	-76,700	-76,700	실제 지출액 감소
행정안전부	예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8,634	-60,000	-60,000	실제 지출액 감소
국토부	기금	자율주택 정비사업	160,000	-60,000	-60,000	실제 지출액 감소
방위사업청	예산	철매(중거리지대공유도부기천공)	510,470	-50,000	-50,000	실제 지출액 감소
중소기업부	기금	창업기업자금(유자)	2,130,000	-50,000	-1,000	실제 지출액 감소 효과 있으나 유자 사업으로 통계적 과장
국토부	기금	집주인임대주택사업	300,000	-50,000	-1,000	실제 지출액 감소 효과 있으나 유자 사업으로 통계적 과장
국토부	기금	도시재생 지원(유자)	179,184	-46,200	-924	실제 지출액 감소 효과 있으나 유자 사업으로 통계적 과장
고노부	예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36	-43,750	-43,750	실제 지출액 감소
고노부	예산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412,227	-41,267	-41,267	실제 지출액 감소
고노부	기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713,543	-40,035	-40,035	실제 지출액 감소
국토부	기금	영구임대출자	310,028	-38,700	-38,700	실제 지출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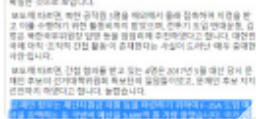
기재부와 각 부처와의 관계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팩트체크] 또 정부, 재단지원금 주려고 국방예산 삭감했다?

많은 방사청 사업 감액이다"며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조차 없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및 F-35A 구매 사업 삭감의 ...



아시아경제 | 2021.08.02. | 네이버뉴스

국방부 "F-35 내년 예산 삭감 전력화 지장없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방사청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방위 예비심의 조사 없이 진행된 감액인 점을 유추하면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



매일경제 PICK | 2021.07.28. | 네이버뉴스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 줄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니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방사청 사업 삭감 이유

"니가 왜 거기서 깎여"...국회정... 아시아경제 PICK | 2021.07.28. | 네이버뉴스
정부, 2차 추경서 논의 없이 국방비 삭감 논란...5680억... 더퍼블릭
첨단전투기 예산깎아 국민지원금 매일경제 | 2021.07.28.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

SBS | 2021.08.03. | 네이버뉴스

[취재파일] 'F-35 예산 전용' 비판에 방사청 함구...정치권력 눈치 ...

이쯤 되면 방사청은 "국방비 삭감액으로 추경 마련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매체를 향해 악의적 보도와 주장이라며 한소리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방사...



미디어오늘 PICK | 2021.07.27. | 네이버뉴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단 한 곳의 매체도 보도하지 않은 추경...

국회 삭감 사업 총 42개 중, 절반 이상인 22개 사업 삭감이 방사청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국회에 방사청 사업 감액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 정부가...



아주경제 | 2021.07.29.

北김정은 별벌 떠는 F-35A 예산 또 삭감...국방 예산 2조3365억원...



국회는 몰랐던 예산

- 김희태 논란이 끝났다. 미래한국당 의결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주... 2020.04.28.
- 모처럼 한목소리 낸 여야... "일본-의료진 연가보상비 삭..." 의사신문 | 2020.04.28.
- 홍남기 "일본만 연가보상비 감액 제외 ... 머니투데이 | 2020.04.28. | 네이버뉴스
- "일본 직원 연가보상비 삭감 막아달라" 국민 청원 이코리아 | 2020.04.28.
- 홍남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 삭감...일본 직원들 인센..." 톱스타뉴스 | 2020.04.28.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

계일보 PICK | 2020.04.27. | 네이버뉴스

'보상비 삭감?... "고생한 일본 직원 제외" 靑청원 화제

靑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장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 조총...코로... 서울신문 | 2020.04.27. | 네이버뉴스
착헌법기관 ... 정책브리핑 | 2020.04.27. | 네이버뉴스
' 없애면 안된다' 메디소비자뉴스 | 2020.04.27.

靑 반납하고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못받는다
靑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은 연가보상비...다.일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靑 "일본 정은경 본부... 세계일보 | 2020.04.24. | 네이버뉴스
일본 지휘...정은경 본부... 매일경제 | 2020.04.24. | 네이버뉴스
靑가 3개월간 밤낮없이 코로나19 대... 메디게이트뉴스 | 2020.04.24.
정은경 본부장도 공무원 급여 반납 정책... 인사이트 | 2020.04.24.

뉴스 6건 전체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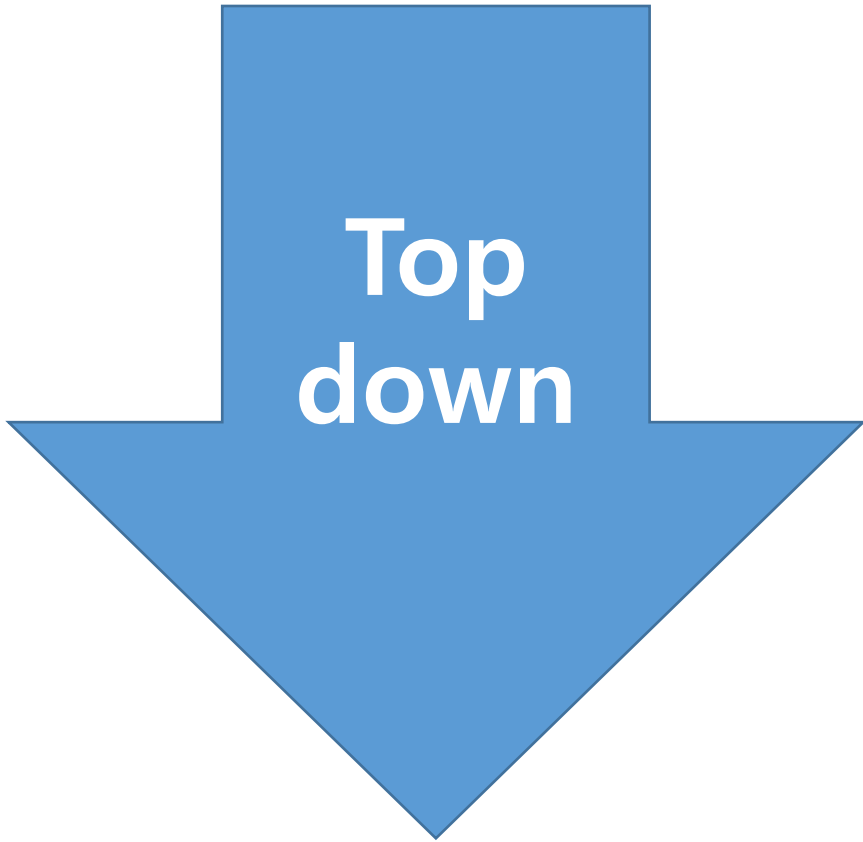
TBS | 2020.04.23.

"일본 연가보상비 깎지말고 국채 발행해야...형평성 없는 거짓"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준강제적으로 많이 보내는 상황에서 연가를 다 쓴 사람은 어차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 일본에 계신 분들은...



[언론보도 해명] 모든 국가직 공무원 ... 정책브리핑 | 2020.04.23. | 네이버뉴스





감사합니다